# 민주 비주류 '反 정세균' 세몰이 폭풍전야

## 내달 4일 출범 쇄신연대, 워크숍서 당운영 성토

## 전대 룰 협상 요구… 주류측과 한판대결 불가피

민주당 비주류가 '반(反) 정세균'을 기치로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서면서 8월 전당대회에서 주류 측과 한판 대결이 불가피해지게 됐다.

더욱이 비주류 측이 기선을 잡기위해 전대 룰 협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주류 측은 박주선·정동영·천정배·추미애 의원 등의 주도로 지난 16일 '쇄신연대 준비위(위원장 김영진)'를 발족한 데 이어 27일 오후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의 비전과 전략, 정책 등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민주당의 6·2 지방선거 승리는 현 정권의 국정실패에 대한 반사이익일 뿐이고 정권교체를 위해선 뼈를 깎는 쇄신과 당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을 집중 성토했다.

특히 다음 달 4일에는 '쇄신연대'를 공식 출범시키고 전국 권역별로 '당원행동대회'를 열어 전국 조직화에 시동을 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영진 위원장은 매일 비주류 측 인사들을 만나 세력화에 대한 의견을 조율 중이다.

문제는 비주류 측의 핵심인 박주선·정동영·천정배 의원 모두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이미 지난해부터 전국적 조직망을 형성하는 중이며 정 의원 측도 대표 도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천 의원도 이미 대표 도전을 선언한 상태로 서로 포기하기 힘들 정도로 속도를 낸 상황이다.

물론 쇄신연대 측은 후보 단일화를 집단지도체제 문제 등이 정리된 다음에 논의하기로 한 상태지만 '반 정세균' 이외에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단일화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이달 30일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는 차기 당권을 거머쥐기 위한 계파 간 신경전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 있다.

7·28 재보선 및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의 진로와 전대 준비기구 등에 대한 '끝장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이날 의총에서 비주류 측은 임시지도부 구성과 '전대 룰' 변경, 집단지도체제 및 당권·대권 분리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류 측은 "지금은 전당대회보다 7·28 재보선 승리에 집중할 때"라며 "지방선거 민심을 받들어 당이 하나가 돼 현정권에 맞서야할 이때 주류와 비주류가 멱살잡고 싸우는 모습은 재보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대 관련 룰 등이 자칫 논란 거리가 될 경우 주류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공격을 피해가는 분위기다.

당 안팎에서는 현재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훨씬 비민주적인 당헌·당규를 갖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경우 주류 측이 양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권·대권 분리가 이미 돼 있고 현직 당 대표가 차기 전대에 나서면서도 사퇴하지 않을 수 없게 돼있다.

관계자는 "주류 측이 모든 것을 독점하려 한다면 비주류와 명분 싸움에서 이기기 힘들 것"이라며 "하루 빨리 당헌·당규를 민주적으로 고쳐 내부 분란으로 자멸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쇄신연대 준비위원회'(가칭)는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워크숍을 열어 당의 비전과 전략, 정책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 지략 빛난 박지원 리더십 주목

## 세종시 수정안 표대결 유도

## 與 집시법 강행처리 막아

지난달 7일 취임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박 대표의 강온 양면 전술을 토대로 한 '대화와 협상'의 리더십이 오랫만에 여야 간의 '정치'를 복원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박 대표는 세종시 수정안의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대신 표 대결을 이끌어 냈으며 집회 및 시위법 문제를 놓고도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막아내며 상임위 점거를 하루 만에 풀어냈다.

이는 박 대표가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막후 정치력를 발휘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강온 병행 전략은 당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우선 하루에 세 차례씩 상임위와 본회의 출석현황을 체크, 회기 후 공개키로 하는 등 군기잡기에 나서는 한편 '보상책'으로 예결위 자리 11석을 공석으로 남겨 뒀다.

특히, 박 대표는 지도체제 개편 등 민감한 당내 현안에 대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등 뚝심의 리더십도 보이고 있다. 그는 단일성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정세균 대표 체제에 맞서 차기 전당대회에서 집단지도체제 도입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 대표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용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치열한 토론과 경쟁을 통해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현재의 민주당 상황에서는 집단지도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류-비주류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조정자 역할에 나서는 박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 세종시 부의·집시법 개정안

# 여야, 정면 충돌 조짐

## 28~29일 본회의 회부

6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의와 집시법 개정안 등을 놓고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주류 측과 민주당, 한나라당 내 친박계 등이 오는 28~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한판 대결을 보일 예정이며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천안함 대북결의안, '스폰서 검사' 특검법 처리를 놓고도 여야는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28~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집시법안과 대북결의안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집시법 개정안의 경우, 야간 옥외 집회 허용 범위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가 현격해 토론과 협상이 겉돌고 있다. 한나라당은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밤 11시~오전 6시'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모든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자정~오전 6시' 주거지역, 학교와 군사시설 주변 등지에 한해 규제하자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대립은 세종시 법안의 본회의 상정시 극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는 상임위에서 이미 부결된 세종시 수정법안의 본회의 부의 절차에 돌입했으나 야당과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는 여전이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정법안은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희박한만큼 박희태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하는게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지나 민주당이 상정 자체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실력 저지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 남구 전략공천이냐 여론조사냐

## 민주당 재보선 후보 선출방식 관심

## 충주 박상규 전의원 영입 공천 건의

7·28 남구 국회의원 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입지자가 10여명을 넘어서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천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장 전략공천과 여론조사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전략공천의 경우, 중앙당의 자기 사람 심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여론조사는 단순한 인지도 조사에 그친다는 지적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충주시 국회의원 보궐 선거와 관련,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박상규 전 국회의원을 중앙당 공심위에 공천을 건의하기로 결정,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 남구 보궐선거도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여론을 토대로 적절한 후보군을 구성한 뒤, 중앙당 공심위에 공천을 건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역 여론과 전문성 등을 고려 3~4배수의 후보군을 선정한 뒤, 중앙당에 추천하면 공심위에서 검증 작업에 나서 1~2배수로 압축하고, 이를 토대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이자 중앙당 공심위원인 김동철 의원은 27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25일 공심위를 열어 기본적인 공천 심사 원칙 등을 논의했다"면서 "남구 보궐 선거와 관련,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거쳐 적정 후보를 중앙당에 건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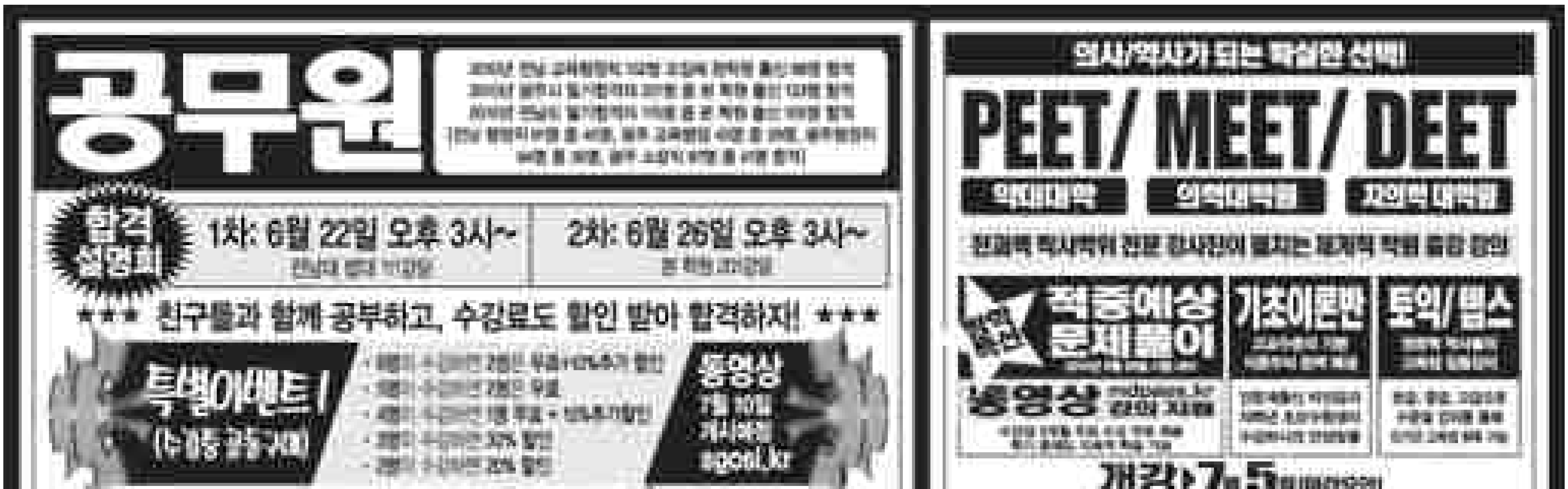
김 의원은 이어 "여론조사 경선은 단순한 인지도 조사에 그칠 수 있는데다 재보궐 선거 특성상 경선이 어려운 만큼 경선과 전략공천의 장점을 적절하게 충족할 수 있는 공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25일 열린 공심위에서는 재보궐 선거 특성상 전략공천을 통해 후보를 선정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지배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28일과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7·28 재보궐 선거 공천 방법을 가닥 지은 뒤 공심위에서 본격적인 후보 심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모든 입지자들의 입맛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남구 보궐선거 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한 모 후보 핵심 관계자는 "중앙당에서 여론조사경선을 외면하고 전략공천을 통해 후보를 선정한다면 무소속 출마에 나설 수박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남구 보궐선거는 후보자들이 난립한데다 시간도 촉박해 전략공천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당의 원칙은 광주시민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